# 지방행정체제 개편 다시 공론화

## 한나라 허태열 최고 "70개 광역시로 재편해야"

## 시·도 폐지, 시·군·구 통합·등 정치권 논란 예상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권 내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특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당시 행정자치부가 어떤 모델로 하면 좋을 지 이미 용역을 마친 상태"라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을 성안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틀과 경제적인 안정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의에는 들어가되 절대 서둘러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40여개의 시·군구를 70개 안팎의 자치단체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연찬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非) 자치단체 등 3~4개 계층으로 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 행정권역 체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며 "시와 광역시, 도를 폐지하고 현재 234개 시군을 50~70개 정도로 줄이고 광역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몇 개씩 묶어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묶자는 얘기"라며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상도도, 전라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 감정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17대 국회 때도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방안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 DJ, 노르웨이 5박 6일 방문

###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참석 기조연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참석차 9일부터 5박6일의 일정으로 노르웨이를 찾는다.

'노벨평화상수상자 후속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 스타방게르시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동행하며 비서실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하태윤, 최경환 비서관이 수행한다.

김 전 대통령은 10일 스타방게르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11일 '대화의 힘-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호주의 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패널토론을 갖는다.

연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햇볕정책과 냉전시기 동서간 대화 등 이른바 '상호주의 대화'가 성공한 역사적 사례를 들며 공통이익을 전제한 평화적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갈등 해결을 주창한다.

사흘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노르웨이 정부 인사, 노벨위원회 관계자, 평화·환경단체, 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9·11테러 이후 안보 상황, 대중과의 소통,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등 안건이 토의된다.

김 전 대통령은 2일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이임인사를 받고 4일에는 방한하는 에니 팔리오마뱅어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연합뉴스

## "재·보선 사유 제공 정당서 선거비 부담"

### 민주 백원우 의원 개정안 발의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이들의 소속 정당이 선거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선거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보선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해당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이면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재보궐 선거는 국가적 낭비인데 사유를 유발한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정당이 선거를 투명하게 치르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 로고 '소나무' 확정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달 31일 당산동 당사에서 소나무를 당 로고로 확정한 뒤 금강송을 형상화한 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노위, 민주당서도 찬밥

〈환경노동위원회〉

### 비인기 상임위 전락…위원 배정 진통

### 5석 중 1석은 아예 민노당에 내 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인기 상임위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위원 배정에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번 환노위 배정을 놓고 논란 끝에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혜영, 김재윤, 김상희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진용을 갖췄다.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및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추 위원장과 원내대표인 원 의원이 포진하고 있어 언뜻 호화 진용 같기도 하지만 상임위 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우선 민주당의 환노위 의석 수는 당초 5석이었으나 소속 의원들의 기피현상으로 1석을 아예 민주노동당에 떼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명중 두명은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쉽지 않은데다 김재윤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로 인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사실상 김상희 의원 혼자 고군분투해야 할 형편이다.

사실 환노위가 인기있는 상임위인 적은 없었다. 환경과 노동 분야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상임위일 뿐 지역구에서도 생색이 나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노위는 13대 국회 당시 노무현(통일민주당) 이해찬(평민당) 이상수(평민당) 의원이 '노동위 삼총사'로 불리며 명성을 떨친 것을 비롯, 과거 대여전선의 최전방으로 이름을 날렸다.

때문에 10년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으로선 이같은 환노위 기피현상이 자칫 대여 공세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의 상임위별 토론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김 상희 의원 두명만이 회의석상에 앉아 대화를 하는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18대 국회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녹색 성장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과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한판 승부가 예상되지만 이 상태로는 화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워크숍에서 "민주당으로선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부분인 만큼 '일당천(一當千)'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정권 잡으려면 전국정당 돼야"

### 盧 전 대통령 민주당 전진대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저수지 인근 잔디밭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대통령 선거때 진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경기다운 경기를 못해 본 싸움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당이 계속 내부에서 서로 분열되고 요동치고 하는 동안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호남과 충청표를 합쳐도 영남표만큼 안되고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 못만들어 낸다"며 "이 같은 선거전략으로는 백전백패"라고 훈수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구는 잘되는데 당이 안된다면 정치적 지도자가 못된다"며 지역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요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치인이 정치를 안하면 강연이 본업인데 강연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이 미디어에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여야 'YTN 주식 민간 매각' 공방

### 민 "신 차관 직권 남용" 한 "민간에 되돌려 주려는 것"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공기업 보유 YTN 주식의 민간 매각' 방침 발언과 관련, 여야의 공방전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신 차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정세력에게 YTN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인 주식을 민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신 차관이 문화부 관할 기관도 아닌 공기업에 주식 매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신 차관은 YTN 주식을 서둘러 매각토록 해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에 손실을 유발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 062-226-2601(구 도청 앞)
대리점모집

2008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대상수상!
무안출발 동반자 7% 할인
중국 가을여행 Best 4 상해·황산·장가계·계림
이번 가을엔 중국의 절경속으로 빠져보세요
상해,항주,소주 4일 ₩479,000~579,000
상해,황산,항주 5일 ₩659,000~759,000
상해,장가계(원가계),항주 5일 ₩969,000~1,139,000
상해,계림,용승(온천욕) 5일 ₩889,000
KOREAN AIR 中国東方航空

북경여행 무안출발
[정통]북경,만리장성 4일 ₩439,000
[골프-3NO]북경,만리장성,옹경협 4/5일 ₩639,000
일본 홋카이도 무안출발
[정통/패키지] 대마도 역사탐방 2/3일 ₩319,000~399,000
아소, 벳부 3일 ₩299,000

추석특선 인천출발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유럽/남태평양

동남아 인천출발
HIT 푸켓 [일레븐] 6일 ₩399,000~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549,000~1,249,000
대만,화련,아류+온천욕 4일 ₩779,000~839,000
말리 [래프팅 포함] 5일 ₩849,000~1,139,000

크루즈 인천출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크루즈 10/11일 679만원 → 409만원~
코스타 마지카호 크루즈 10일 689만원 → 419만원